

외요세평

정성국

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전 이사장
정성국치과의원장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공공보건의료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의료기관이 지역, 계층 분야에 관계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증진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법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의 긴밀한 관계와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 중심에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기재부 예타 재조사 주목

코로나19를 겪으며 서부산, 대전, 경남의료원이 신규 설립이 승인되면서 광역시도 중 의료원이 없는 지역은 광주와 울산뿐이다. 95% 시민이 원하는 의료원을 설립하기 위해 시와 의회, 시민사회는 부지 마련과 더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의료원 설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예비타당성 재조사 등 기재부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21년 국회에서 광주의료원 설립에 대

광주의료원, 경제성·시민건강에 좋지 않나

한 설계비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2년 12월 중에 예타 재조사 통과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미뤄져 올 4월 중에 결정할 예정으로 있다. 최근 3차 보고회를 진행했지만 KDI의 광주공공의료원 타당성 분석 결과 B/C(편익 대 비용) 비율이 낮게 산출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2021년 서부산과 대전, 경남의료원은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건립이 확정되었다. 서부산과 대전은 2018년부터 예타 조사가 시작되었지만 낮은 경제성 평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공공병원 병상 5,000개 확충의 일환으로 정부의 예타 조사 면제를 통해 가까스로 의료원 설립의 길을 열 수 있었다. 아직까지 예타 조사 제도가 시행된 후 의료원이 예타 조사를 통과해 설립된 예는 없다. 만약 기존의 예타 조사를 기획재정부가 고집했다면 서부산과 대전도 의료원 설립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2021년 11월 기재부는 지방의료원 예타 조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고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의 가중치 등 현행 예타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공공의료·지방의료원 역할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하지만 광주의료원 예타 재조사 과정에서 KDI의 경제성에 대한 보완 자료를 집중 요청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개선 사항이 실제 반영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022년 6월까지 정부는 8조원이 넘는 재정을 병상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에 투입했다. 코로나 대응 초기 2020년 환

자 10명 중 7명을 지방의료원에서 봤는데 손실 보상 예산 가운데 지방의료원에 배정된 건 1조 5,0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민간의료기관에 배정됐다고 한다. 의료원은 코로나19 진료 동원 결과 진료 실적은 더 악화되고 취약계층 의료 공백은 심화되었다. 다시 원상대로 복구하는데도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상가동율도 전국 대다수 의료원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의료원은 재정 악화를 발미로 설 땅을 잃을지 걱정된다. 감염병 초기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에 영웅이라 불리던 공공병원과 의료진들이 공공병원의 재정 악화라는 미명하에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보다 강한 감염병

감염병은 21세기 이후 사스를 시작으로 이번 코로나19까지 주기적으로 반복 발생, 심화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0월 바이오안보전략을 발표하면서 2025년 안에 코로나19보다 더 센 감염병이 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시기 손실보상금으로 쓰인 약 8조원은 공공병원 50년 적자분과 맞먹는다고 한다. 무엇이 경제적인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언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는 감염병 대비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의료원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행정구역 내에서는 의료원을 두도록 하거나 예타 조사에서 면제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인프라사업의 적정요금과 현실화

도권 및 타 대도시 지역의 보급률보다도 높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의한 가스의 도매가격 상승으로 해양에너지는 어려운 딜레마에 봉착하고 있다. 광주시는 사고에 대한 안전과 소외계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소매요금을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지역에는 아직도 약 2만 세대의 이웃이 도시가스 공급을 받지 못해 고물가 상황에서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매번 사용량 점검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므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홀로 사는 가구의 안부도 확인할 수 있어 사회적 가치가 높다.

높은 난방비를 부담하는 세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 기업이 이러한 세대를 위해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거 10년간 광주지역 공공요금을 비교해보면 시내버스 요금 40.0%, 상수도요금 39.5%, 최저임금 109.0%, 소비자물가 15.7%가 상승한 반면,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은 1.8% 상승에 그쳤다.

또한, 다른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공급비용 조정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간 서울 55.9%, 대구 35.2%, 인천 52.5%, 대전 43.2% 등으로 평균 36.3% 조정이 된 반면, 광주는 가

장 낮은 1.8%에 그치고 있다.

이것은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현실화가 다른 업종에 비해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만큼 미진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사고로부터의 안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여건에서도 해양에너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일부 감면해주고 있으며, 불의의 사고로부터 지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타이머 록 설치 사업을 시행했고,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기 무상 설치 사업을 진행했다. 노후 공동배기구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설치비도 지원하는 등 소외계층에게 사회적 책임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밝혔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됐고, 고물가 상황에 따른 배관 등 원자재가 폭등으로 인해 안전관리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들을 고려할 때,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의 안전과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확대를 위해서 소매공급비용의 현실화를 통해 안심도시 광주 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 넘은 ‘데이트 폭력’ 근절하자

왜곡된 사랑이란 이름으로 저지르는 폭력이 매우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데이트 폭력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강력범죄나 다름없다. 처음 사소한 폭력이 죽음에 이르는 과정으로까지 발전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더 이상 데이트 폭력을 방치하면 안 되는 수준에 다다랐다.

데이트 폭력을 방치하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폭력 엄벌과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재복 고흥경찰서 녹동파출소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 哲 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 善 男		편집국장 姜 聲 秀	
jndn.com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5-7721	
정치부	(062) 720-1060	문화체육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
경제부	(062) 720-1067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사회부	(062) 720-1050	편집부	(062) 720-1073	관리국	(062) 720-1012
사회2부	(062) 720-1043	뉴미디어본부	(062) 720-1006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기사제보 jndn@chol.com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시설

광주·전남 공공기관 이전 적극 협력 기대

정부는 올해 1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시즌2’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360곳의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을 본격 화함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의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공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고 뛰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관련 토론회도 이 같은 차원에서 마련됐는데, 광주시는 에너지·인공지능(AI)산업 연계 국가 공공기관 유치, 광주·전남 상생과 공동 대응, 선 혁신도시, 후 광주도심 유치, 인태 양성 사다리 완성 등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4대 추진 방향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다. 토론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지역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지역 특성에 맞는 유치 전략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광주시는 현재 한국데이터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전인재개발원 등을 최우선 유치

목표로 삼으며 지역 특화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기관 35곳을 후보군에 올려놓았다. 전남도는 농협·수협중앙회, 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 등 40여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전남지역의 핵심 타깃은 농협·수협중앙회로, 본사 유치 이후 다양한 연계 협력 사업을 통해 전남도의 근간인 농수산업을 혁신하고 궁극적으로 농수산 생명 융복합 허브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및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별이는 공공기관 유치 경쟁은 갈수록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향후 정부 기본 계획에 부합한 전략을 수립하면서 전담부서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농·수협중앙회 이전은 부산과 강원, 전북, 경북 등에서도 겨냥하고 있고,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충북이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은 미래 지역발전 방향을 ‘공동혁신도시 시즌2’로 맞추고 제무장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 개정령안 절차 신속히 진행돼야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을 올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최초 ‘여순사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최근 차관회의 심의를 신속하게 통과해 개정령안 실행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년간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 신고는 올 1월27일 기준으로 총 6,774건이 마감됐으나 지난 1949년 전남도가 발표한 여순사건 인명 피해자는 1만 1,131명이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아직도 신고가 안 된 희생자·유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은 단 한 사람의 희생자·유족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 신고 접수 받기 위한 기간을 재설정함으로써 계속적인 추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 의원은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하는 실무 간담회를 지난해 11월24일과 올 2월15일 두 차례 가졌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진상규명 신고 기간 ‘1년’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12월8일 발의하는 등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소 의원은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법제처 심사’를 필요 최소한으로 단축하기 위해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법제처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희생자 유가족들과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했다. 시행령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2월1일과 2일에는 이완구 법제처장과 두 차례나 직접 통화하며 법제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고, 이에 이 처장도 화답하며 신속한 심사를 이끌었다는 평가다.

앞으로 절차는 오늘 개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예정이고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공포가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직후 발효돼 제2차 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기간이 즉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제2차 신고기간이 재개될 예정인 만큼, 여순사건위원회와 실무위원회가 신고 접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때다.

근로시간보다 노동자 권리에 초점을

기저수첩



오지현

경제부 기자

업에서만 근무하지 않는다. 중소기업부터 아르바이트생, 하다못해 프리랜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노동자의 모습과 환경은 천차만별이다. 있는 연차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달 휴가’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이 아닌 ‘유연화’라고 설명했다. 한 주의 노동시간이 늘면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고, 이 또한 노사 합의에 따라 진행하니 노사의 입장 모두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과연 그럴까? 현재 노동자의 85%가 노동조합 없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20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국내 임금노동자 가운데 대기업 정규직이면서도 노조에 가입한 비율은 8.7%에 그친다. 비정규직 노동자 84.6%는 일하는 사업장에 노조가 없으며, 9.2%는 가입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은 경기도 전에 뒤러려고 한다는 속담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노동자들을 위해 존재하나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보장 이행에 더 초점을 뒀다. 지금이야말로 이 장관이 자평한 ‘역사의 진일보’의 시작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아야 할 때다.

기고

정성창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우리는 최근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및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뿐 아니라, 열차 탈선사고로 인한 부상 및 불편, 제빵공장 사고로 인한 전 국민적 공분 및 불매운동 등을 보면서 안전관리와 생명존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잊지 않아야 한다.

기업은 가격이 지나치게 통제될 때, 원가 절감을 위해 안전을 위한 비용 지출을 축소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최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그리고 도시가스요금까지 수 차례 인상이 되면서 시민들이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비용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광주시와 해양에너지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전국에서 으뜸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광주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국 1위’로 수

독자광장

최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인이나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최정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퇴출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방송계에는 출연자의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가 하면 일반인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기를 얻었으나 과거 행적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범죄 신고가 2020년에서 2021년 1년 사이 무려 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접적인 폭언이나 폭행 외에도 연인의 휴대전화나 SNS 등을 점검하면서 사생활까지 감시하고 구속하는 일도 다반사다.